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복지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6.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달서구청장(건강증진과장)
- 발의일자: 2024. 5. 30.(목)
- 회부일자: 2024. 5. 30.(목)
- 검토기간: 2024. 5. 30.(목) ~ 6. 5.(수)

### 2. 개정이유

-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현실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다자녀 가정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나. 상위조례 및 개별 조례의 내용 삭제(안 제2조, 제12조)
- 다. 육아용품출산축하용품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5호)
- 라. 입학준비금 및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기준·금액의 변경(안 제6조)

##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감면 절차 및 지원 방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 부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3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 시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와 기부행위에 대해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항을 살펴볼 때
- 구청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경우 최소한 그 필요한 비용을 알 수 있도록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 금액과 대상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현행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안 제3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u>한해 20만원을</u>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u>다만,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 ----- <u>한해</u> ----- --. <u>&lt;단서 삭제&gt;</u>	제6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
② 육아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u>20만원 이내로</u>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u>&lt;신설&gt;</u>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lt;신설&gt;</u>	③----- ----- ----- ----- -----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다. 생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